

정규직-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.2.(금) 매일경제(온라인), “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...‘실패한 정책’ 반복은 안돼(사설)”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- 정부는 정책 자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‘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대상’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여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하였음

* (‘23년 이전)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→ (‘26년) 30인 미만 기업

- 향후에도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음
-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외에도 노동시장 내 구조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래 과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·제도·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, 개정 노조법을 통해 원하청 교섭 활성화를 지원하겠음
 - 특고·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‘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’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겠음
 -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차별 예방 및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일터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개선하겠음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570)
		담당자	사무관	김누리 (044-202-7578)